

2025년 일자리 분야 예산 분석

Analysis of the 2025 Budget for the Employment of Vulnerable Groups

고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 부연구위원

이 글에서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의 20대 핵심 과제인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의 도약 지원과 청년 도약 지원을 중심으로, 일자리 관련 주요 사업을 검토하였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자립 지원을 위해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근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노인 일자리 확충 및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요건 완화 등을 꾀하였다. 또한 청년층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돕고자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빈 일자리 채움 3종 패키지를 신설하였다. 민간 노동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재정 지원 일자리는 근로를 지속하는 데 유용한 만큼 물량을 늘리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일정 부분 긍정적이다. 하지만 재정 지원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의 고용률 제고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낮은 임금 수준으로 대표되는 낮은 일자리의 질 문제를 외면하기 어렵다. 특히 중소기업 위주의 청년 일자리 지원 대책이 성공하려면 중소기업의 근로 여건 개선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근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지원 인력과 기관에 대한 예산 확충도 필요하다.

1 들어가며

국정 운영의 좌표를 보여 주는 예산의 12대 분야에서 보건·복지·고용 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만큼 해당 분야가 국정 운영에서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특히 정부는 “민생활력, 미래도약”을 기치로 2025년도 예산안을 마련, 전체 예산 677조 4000억 원 중 36.8%에 해당하는 249조 원을 보건·복지·고용 부문에 배정하였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이 확정되었다(기획재정부, 2024b). 최종 확정된 2025년 세출 예산은 정부 예산안보다 4조 원가량 줄어든 673조 3000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서는 4조 1000억 원(2.5%) 늘어난 수준이다(기획재정부, 2024b). 확정된 세출 예산의 3분의 1 이상이 보건·복지·고용에 할당되어 2025년 36.9%를 차지, 2016년 대비 약 5.2%포인트 증가했다(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sm/UOPKOSMA08>).

2025년 예산(안)은 4대 중점 투자 방향, 20대 핵심 과제로 구성된다. 이 글에서 초점을 맞추는 일자리 예산과 관련한 주요 과제는 중점 투자 1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 복지'의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 도약 지원'과 중점 투자 3의 '미래 준비하는 체질 개선'의 '청년의 힘찬 미래도약 지원'에서 주요하게 다뤄진다. 구체적으로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 도약 지원에서는 저소득층의 일을 통한 탈빈곤, 중고령자의 계속 근로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뒷받침하는 예산을 배정하였고, 청년의 힘찬 미래도약 지원에서는 청년의 원활한 입직을 돕기 위한 정책을 신설하거나 확충하였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2025년 일자리 부문 예산 핵심 과제 및 배정 예산은 <표 1>과 같다. 이하에서는 <표 1>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2025년도 일자리 분야 예산을 검토한다.

[표 1] 2025년 일자리 부문 과제 및 주요 내용

(단위: 백만 원, %)

중점 투자	세부 과제	주요 내용	관련 단위 사업명	예산 규모		
				2024년(A)	2025년(B)	증감(B-A)/A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 복지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 도약 지원	(저소득층) 자활 근로자 탈수급지 최대 150만 원의 자활 성공금 지급 등	자활사업	749,864	820,578	9.4
		(고용취약계층) 정년 도달 근로자 재고용 장려금 지급 등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2,026,370	2,184,689	7.8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62,102	56,730	-8.7
미래 준비하는 체질 개선	청년의 힘찬 미래도약 지원	일 경험 확대, 구직 단념 청년 지원 등	해외 취업 지원	57,540	47,116	-18.1
			청년 취업진로 및 경험 지원	244,113	291,779	19.5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	657,680	777,181	18.2

출처: "2025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 국회예산정책처, 2024, p. 62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과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각목 명세서", 고용노동부, 2025, "202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보건복지부, 2025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2025년 일자리 분야 예산 현황

정부는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면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및 자립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기획재정부, 2024a). 이를 구체화하는 수단으로, 2025년 예산에서는 “취약계층의 사회이동성 개선”과 “노인과 중장년의 일자리 지원”, 그리고 “청년도약지원”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다(기획재정부, 2024c). 취약계층의 사회이동성 개선과 관련해 일자리 정책으로는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기획재정부, 2024c, p. 3). 노인과 중장년의 일자리 지원에서는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중장년층의 준비된 은퇴 지원 및 직업훈련 강화, 계속고용 지원을 꾀하고자 하였다(기획재정부, 2024c, pp. 4-5). 그리고 청년 도약 지원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경험 기회 확충 및 구직 단념 청년에 대한 취업 지원 및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기획재정부, 2024c, p. 19). 이하에서는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근로 인센티브 강화, 중장년층의 계속 근로 지원, 청년층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을 중심으로 2025년 정부의 일자리 예산을 검토한다.

가.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 인센티브 강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면서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공공사회

보장의 대상으로 포괄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급자에 대한 근로 의욕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이를 완화하고자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조건부 수급자)에게는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화하였다. 자활사업은 저소득층의 소득과 고용 보장에서 일정 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보인다. 특히 자활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고용 안전망으로 기능하였다(함선유 외, 2023). 정부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조치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 자활사업 예산을 확충하여 당시 자활근로 참여자 수가 크게 늘었다. 그러나 자활사업 참여자가 증가함에도 탈수급은 정체되어 자활사업이 실질적인 탈빈곤을 도모하지는 못한다고 지적된다(함선유 외, 2023, pp. 100-121). 특히 실질적인 탈수급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자활근로 사업에 반복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함선유 외, 2023, pp. 100-121; 최인혁 외, 2024, pp. 60-61).

이에 2025년도 예산에서는 자활근로 참여자의 탈빈곤 지원을 위하여 근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자 관련 예산을 증액하였다. 특히 주목할 지점은 자활성 공금을 도입한 것이다. 자활근로 참여자가 민간 시장 일자리로 이행할 경우 소정의 현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탈수급 후 6개월간 근로를 지속하면 50만 원, 1년간 지속하면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자활역량평가에서 80점 이상인 사람들이 배정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의 취업성공수당과 유사한 것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자는 프로그램 참여 후 민간 시장에 취업한 뒤 소정의 기간 동안 근로를 지속하면 추가 수당을 받아 왔다.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해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과 마찬가지로 민간 노동시장으로의 성공적인 이행과 근속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장기 근속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자활급여 단가 인상분과 참여자 수 증가를 예산에 반영하였다. 최근 들어 최저임금이 매년 5% 이상 인상되면서 자활급여 단가와 그 격차가 벌어졌다(함선유 외, 2023, pp. 14-15). 이에 2025년 예산에서는 자활급여를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높이고자 하였다(기획재정부, 2024c, p. 3). 구체적으로 자활급여 단가를 3.7% 인상하고 참여자 수를 3000명 확대하는 것을 반영하여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600억 원 늘었다(보건복지부, 2025a, p. 19). 이 외에도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를 비롯한 운영 인력의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자활센터 운영 지원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73억 원 늘어 974억 원이 배정되었다.

나. 중고령자의 계속 근로 지원

전례 없는 고령화로 생산인구 감소가 가까운 미래의 일이 되었다(한국고용정보원, 2024). 생산성

저하를 막기 위해 숙련된 고령인구의 노동시장 잔류를 돕는 조치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또한 66세 이상 노인의 3분의 1 이상이 빈곤한 우리 현실에서 근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노인층의 생활 안정 차원에서도 중요하다.¹⁾ 실제로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41.9%가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강은나 외, 2023). 그리고 이들의 다수는 경제적 이유로 근로 지속 의사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일하고 싶다고 밝힌 노인의 64.2%는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하고 싶어 하였다(강은나 외, 2023).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2025년 예산에서 노인과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20대 핵심 과제의 하나로 내세웠다(기획재정부, 2024c). 해당 과제에서 일자리 관련 지원의 핵심 조치는 노인 일자리 공급 확대와 계속고용장려금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1) 노인 일자리 확대

2004년 정부는 노인의 소득 보장 및 사회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도입하였다. 2000년 초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면서 노인 빈곤 문제의 해결책으로 생산적 노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다(김가원, 2024). 이러한 배경에서 노인 일자리

1) 최근 10여 년간 노인빈곤율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중위 소득 대비 가처분소득 비중으로 산출한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39.3%이다(OECD Poverty rate, https://www.oecd.org/en/data/indicators/poverty-rate.html?oecdcontrol-9f300511bc-var6=Y_GT65). OECD 국가 중 에스토니아(2021년 노인빈곤율, 41.3%) 다음인 2위 수준으로 노인 빈곤이 심각하다.

[표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유형별 사업량 및 예산내용

(단위: 개, 원)

	2024년		2025년	
	사업량	예산	사업량	예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03만	19,957억	109.8만	21,535억
공익활동형	65.4만	10,579억	69.2만	11,194억
사회서비스형	15.1만	5,896억	17.1만	6,702억
민간형	22.5만	2,440억	23.5만	2,519억

출처: “202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보건복지부, 2025a, p. 54.

사업은 2004년 제도화되어 약 3만 5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에서 시작해 10여 년 만에 그의 10배 수준으로 늘었다(2015년 38만 개, 한국노인 인력개발원, 2016). 물량이 늘어난 것뿐 아니라 실제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년층의 생활 안정과 건강,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김가원, 2024).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힘입어 정부는 계속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왔다. 2025년 예산에서도 그러하다. 정부는 2025년 예산에서 소위 베이비붐세대(1955년부터 74년생)의 본격적인 은퇴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조치로 기초연금 단가를 인상하는 것과 더불어 노인 일자리 확대를 밝혔다(기획재정부, 2024c, p. 4). 사업별 세부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수요가 많은 공익활동형이 2024년 65만 4000개에서 2025년 69만 2000개로 약 3만 8000개 늘어 가장 크게 늘었다. 사회서비스형도 15만 1000개에서 17만 1000개로 2만 개가 늘었다, 여

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신규 사업으로 아이돌봄 사업 도입을 밝힌 것이다(보건복지부, 2025a, p. 54). 구체적으로 해당 사업의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아이돌봄 시범사업을 도입, 5000명의 일자리를 신규 창출할 것으로 밝혔다(보건복지부, 2025a, p. 54).

2) 계속고용장려금 요건 완화

다음으로 정부는 2025년 예산에서 중장년층의 준비된 은퇴를 지원하고자 40세 이상 중장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강화 및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의 요건을 완화하였다. 중장년층의 경력 설계 및 전직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과 노동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중년 특화 과정에 대한 개선을 통해 직업훈련 역량 강화도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기획재정부, 2024c, p. 5). 특히 일자리와 관련해 주목할 점은 계속고용장려금의 지급 요건 완화를 밝힌 것이다.

2020년 정부는 장년층이 계속해서 노동시장에

잔류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하여 계속 고용된 근로자의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였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제도가 있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중고령자를 계속해서 고용할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하는 경우 혹은 정년 변경 없이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소정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다(고용노동부, 2024b, p. 10). 해당 제도와 관련해 2025년부터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일부만을 재고용하더라도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요건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정년 연장보다 재고용에 대한 선호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자 전원을 재고용해야 장려금이 지원되는 등 까다로운 요건으로 인해 실적이 부진하다는 비판을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조선일보, 2024).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반영하여 2025년 예산에서는 약 2만 명을 지원하는 것으로(1만 946명-4분기간, 8757명-3분기간) 약 200억 원을 배정하였다(고용노동부, 2025). 이는 2024년 지원 인원 1만

1000여 명보다 73%가량 증가한 규모이다.

다.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

코로나19 국면에서 9%까지로 치솟았던 청년 실업률이 6%대로 낮아지는 등²⁾ 청년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청년들이 첫 직장을 잡기까지의 소요 기간은 같은 시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통계청, 2024). 이에 정부는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돕고자 청년층에 대한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에게 양질의 일 경험을 제공하여 노동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고용노동부, 2024c, p. 3), 2023년 크게 확대되었다. 국정 과제로 민관 협업을 통한 양질의 일 경험 기회 제공이 제시되면서 2022년 565억 7100만 원에서 2023년 1262억 9300만 원으로 두 배 이상 증액되었다(고용노동부, 2023, p. 70). 고용노동부의 자체 평가 결과 해당 사업에 대한 청년 당

[표 3]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세부 항목별 지원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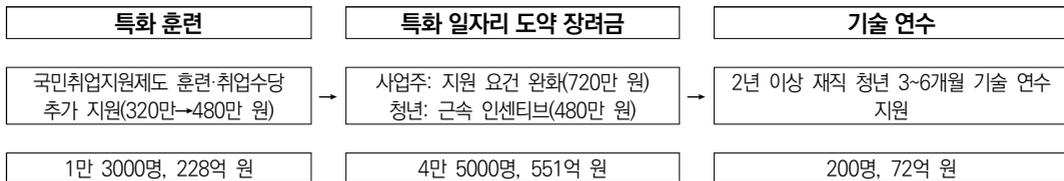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체	국내 인턴	해외 인턴	프로젝트	ESG	기업 탐방
24년	48	18.5	0.5	6	8	15
25년	58	23	1	10	9.5	14.5

출처: "2025년 예산안 20대 핵심과제", 기획재정부, 2024c, p. 19.

2) 국가지표체계. (n.d.). 청년실업률.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popup=Y&clacCd=2&idxCd=5028>

[그림 1] 빈 일자리 채움 3종 패키지(2025년)



출처: “2025년 예산안 20대 핵심과제”, 기획재정부. 2024c, p. 19.

사자와 기업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용노동부, 2024a, p. 61) 이후에도 계속해서 확대되어 2025년 2024년 대비 1만 명을 확대한 것인데, 세부 내역은 <표 3>과 같다.

이와 더불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취업애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고자 빈 일자리 채움 3종 패키지를 신설하였다. 2023년에도 세 차례에 걸쳐 빈 일자리 업종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 정부는 2024년 한시 사업으로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을 도입하였다 청년들의 실업이 계속해서 문제시되는 가운데, 지방 소멸로 기업에서는 구인난을 호소하는 일자리 부조화가 계속되면서 인력난이 심한 업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한 것이다. 정부가 지정한 빈 일자리 업종에 3개월, 6개월 근속 시 각각 100만 원씩의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다. 다만 해당 사업은 한시 사업으로 2024년 5월 종료되었다. 빈 일자리 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바(고용노동부, 2023) 보다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해 2025년 정부는 이를 [그림 1]과 같이 체계화하였다. 조

선업을 비롯한 10개 업종의 중소기업에서 일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15~34세)을 대상으로 훈련수당 지원부터 취업성공수당까지 지급하고, 장기 근속하면 도약 장려금을 지원하거나 추가 기술 연수 기회까지 제공하는 단계적 지원 체계를 확립한 것이다.

3 2025년 일자리 분야 평가

가. 자활사업 전담 인력의 처우 개선

근로 역량 미약자의 자활사업 참여가 확대되고,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이 다원화되면서 자활사례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최인혁 외, 2024). 이에 정부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탈수급 유인 확대와 더불어 자활사례관리사의 확대 배치를 예산에 담았다. 자활사례관리사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근로 기회 제공 및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회복지 전문가로,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에 따라 ‘참여자 상담, 참여자 사례 파

일 관리, 내외부 사례회의 운영, 외부 자원 발굴 및 관리, 참여자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보건복지부, 2025c, p. 61). 2024년 현재 전국 125곳에 배치된 자활사례관리사를 2025년 하반기 125명을 추가 배치하여 전국 250곳에 확대 배치하기로 한 것이다(보건복지부, 2025a, p. 37). 이에 자활사례관리 예산을 14억 원 증액하여 총 40억 원을 배정하였다.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해 자활사례관리사의 확충은 환영할 일이지만, 이들의 처우 개선 및 자활센터 운영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 2025년 예산에서 자활사례관리사 월별 임금 단가는 261만 8000원으로, 전년대보다 3% 인상되었다. 이는 2025년 사회복지이용시설 봉급 권고 기준(사무직)의 5호봉 수준이다(보건복지부,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의 평균 호봉보다 상당히 낮은 편이다(이문수, 2022). 이 때문에 기준보다 실제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가 많은데, 인건비가 전액 보조되는 것이 아니어서 인건비를 제외한 자활센터의 운영비가 충분하지 않다(이문수, 2022). 이는 충분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결과로 귀결되고 있다(이문수, 2022). 다른 한편 임금 수준 인상에도 불구하고 타 사회복지 종사자들보다도 인건비가 낮아 신규 채용이 여의치 않기도 하다. 실례로 2025년 신규 도입되는 고독사 예방 사례관리사보다 월 급여가 30만 원가량 적다(보건복지부, 2025a, p. 36). 내실 있는 자활사례 관

리를 위해서는 전담 인력에 대한 인건비 보조 및 운영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하겠다.

나. 중고령자의 일자리 확충과 임금 수준 제고

1) 양적 확대와 함께 임금 수준 제고 필요

전술한 바와 같이 그간 정부는 계속해서 노인 일자리를 확충해 왔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실제 수요보다 일자리의 공급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노인의 약 22.5%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 하나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6.7%에 불과하다(강은나 외, 2023). 참여 경험이 있다고 밝힌 4.1%를 고려하더라도 전체 수요보다 공급이 충분하지는 않다. 특히 참여 신청을 하고도 참여하지 못한 노인이 약 5.5%에 달하여 일하고 싶은 노인층을 포괄하기에는 역부족이다(강은나 외, 2023). 물론 일하는 것 자체가 노년기 빈곤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있다(이승호 외, 2020), 이에 민간 시장에서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노인층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 일자리를 통해서 노동시장 참여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유효하다. 더구나 소득 보충 이외의 건강 개선 및 사회적 관계 증진 등 다양한 효과를 고려하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의미를 가진다 하겠다.

일을 지속하는 것 자체의 긍정적 효과를 고려하면 노인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2025년 일자리 예산도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낮

은 임금 수준을 무시하기만은 어렵다. 최근 2400여 명의 아이돌봄비 퇴사를 보면 더욱 그러하다. 보건복지부는 아이돌봄 시범사업을 도입하기로 하였는데, 유사 사업인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의 서비스 공급자인 아이돌봄미들의 종퇴사가 이어지고 있다. 명확하지 않은 역할과 불충분한 소득 탓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고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시간당 돌봄 수당을 시간당 1만 1630원에서 1만 2180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여성가족부, 2025, p. 8). 그러나 근무 시간이 짧으면서 일은 고된 돌봄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수준의 인상폭인지는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아동이 있는 가정의 돌봄 공백 문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파견할 아이돌보미가 부족해 관련 예산 불용액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서비스 제공 인력의 임금 수준 향상을 비롯한 처우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

2) 계속 고용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 필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점진적 상향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령자의 노후소득 공백을 해소하려면 고령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관련해서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노후에 대비하고, 사업주도 인력 활용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계속 고용 제도의 법제화를 고민해 볼 시점이다. 현재 정부가 계속해서 계속 고용 제도의 자율적 확대를 촉진하고 있으나, 사업주의

노력 의무에 그치는 상황에서 재고용 제도를 비롯한 고령자의 계속 고용 조치가 정착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우리와 유사하게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여 정착시킨 일본은 사업주에게 재량을 부여하는 노력 의무에서 시작해 장기간에 걸쳐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한 바 있다(이승호 외, 2023, pp. 149-155). 다만 일본의 경우 노력 의무였음에도 기업의 순응률이 상당히 높았는데, 이는 규범력이 강한 일본의 특수성으로 보인다(이승호 외, 2023, pp. 158-159). 우리는 사정이 달라 정년 연장보다 재고용 제도에 대해 기업들이 호의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도입 비율은 20%에 그친다(안준기, 2023).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자의 계속 고용은 법관의 재량에 좌우되어(이승호, 2023, pp. 125-128) 중 고령자들이 안정적으로 노후를 설계하기 어렵다.

다른 한편 계속 고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해당 제도 시행일 전 1년 이상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취업 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계속 고용 제도의 운용을 명시해야 하며, 60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30% 미만이어야 한다(고용노동부, 2024b). 적용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고 요건도 까다로운 것이다. 2020년 제도를 시행한 이래 정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요건을 완화, 변경해 왔으나 여전히 문턱이 높다. 기본적으로 이 제도가 정년제도를 갖춘 기업에 한정되기 때문에 정년제도가 없거나 근로계약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영세 사업장 종사자는 원천적으로 제외된다.

고령기 노동과 은퇴 이후의 삶은 노동 생애에 좌우되어 저임금·저숙련 일자리 종사자들의 노후 빈곤은 더욱 심화될 공산이 있다. 이들이 노동시장에 잔류하더라도 계속해서 저임금을 피하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빈곤 방지에 기여하는 만큼(이승호 외, 2020) 이들의 안정적인 노년기 생활 보장을 위해 소득 보장 체계의 내실화와 더불어 고용 기간 연장을 위한 정책적 조치가 보완되어야 하겠다(이승호 외, 2022).

다. 중소기업 근로 여건 및 인식 개선 필요

2025년 정부가 제시한 빈 일자리 채움 3종 패키지는 일시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발전된 형태이다.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의 취업부터 임금 보전, 장기적인 숙련 형성까지 최소 2년간의 장기적인 미래 설계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종전의 한시적 지원금보다 진일보하였다. 2년 근속 후 기술 연수 기회를 얻게 될 청년의 수가 200명에 그치지만, 이는 이제 시작하는 제도여서 2년간 근속한 정책 대상 청년이 적기 때문이다. 제도가 안착되어 빈 일자리 업종에 장기 근속하는 청년 수가 늘어나면 그 수도 늘어날 것이다.

문제는 정책 수요가 충분히 늘어날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기 때문이다. 2025년 빈 일자리 채움 3종 패키지의 지원 대상은 빈 일자리 업종에 해당하는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해당 기업에 취업한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다(고용노동부, 2025, p. 51).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수 이하인 기업으로 소위 중소기업이다.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의 대상이 대개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설계된 것과는 다른 지점이다. 청년들은 업무량에 비해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에 중소기업 취업을 원치 않는 경향이 뚜렷하다(대한상공회의소, 2023). 실제로 중소기업은 임금 수준뿐 아니라 여러 복리 후생에서 대기업보다 수준이 낮다(고혜진 외, 2025), 이런 상황에서 기술 교육 지원이나 소정의 지원금으로 청년층의 중소기업 빈 일자리 취업을 독려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없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4 나가며

이 글에서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의 20대 핵심 과제인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의 도약 지원과 청년 도약 지원을 중심으로 일자리 관련 주요 사업을 검토하였다. 특히 핵심 과제로 제시된 취약계층의 사회이동성 개선과 노인과 중장년의 일자리 지원, 그리고 청년의 미래 도약 지원을 위한 구체적 수단인 자활사업 참여자의 탈빈곤 촉진 및 고령자의 계속 고용 지원, 청년 일 경험 지원 및 빈 일자리 채움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예산과 주요 사업 내

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자립 지원을 위해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근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노인 일자리 확충 및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요건 완화 등을 꾀하였다. 또한 청년층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돕고자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빈 일자리 채움 3종 패키지를 신설하였다.

2025년도 정부의 일자리 예산은 재정을 투입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민간 노동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재정 지원 일자리는 근로를 지속하는 데 유용한 정책적 개입이다. 노동시장 참여는 누군가에게는 일 경험을 쌓고 숙련을 유지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행을 도모하는 수단이 된다. 다른 이에게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미 있는 활동으로 존재 가치를 찾거나 부족한 소득을 보충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민간 노동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재정 지원 일자리는 근로를 지속하는 데 유용한 만큼 물량을 늘리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일정 부분 긍정적이다.

하지만 재정 지원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참여 독려의 긍정적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낮은 임금 수준으로 대표되는 낮은 일자리의 질 문제는 외면하기 어렵다. 특히 중소기업 위주의 청년 일자리 지원 대책이 성공하려면 중소기업의 근로여건 개선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취약계층이 안정적으

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근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지원 인력과 기관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재정 지원 일자리의 사회적 수요를 생각할 때 일하는 당사자가 지속해서 일하는 것은 물론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요자들에게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 지원 일자리의 임금 수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 종사자들의 처우도 개선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 강은나, 김혜수, 정찬우, 김세진, 이선희, 주보혜, 황남희, 김경래, 이혜정, 최경덕. (2023). **2023년도 노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고용노동부. (2023. 12. 28). **'23년 3차례 정부 대책 발표, 빈일자리 수 8개월 연속 감소-맞춤형 빈일자리 대책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2024a). **2023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2024b). **2024년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고령자 고용지원금) 가이드북**.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2024c). **2024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2025).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각목 명세서**. 고용노동부.
- 고혜진, 전지현, 손동영. (2025). **기업 특성별 복지제공 양상 및 복지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가지표체계. (n.d.). 청년실업률.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

- popup=Y&clasCd=2&idxCd=5028
 국회예산정책처, (2024). **2025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 국회예산정책처.
- 기획재정부. (2024a).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 (2024b).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 (2024c). **2025년 예산안 20대 핵심과제**. 기획재정부.
- 김가원. (202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시행 20년(2004~2024)의 성과와 발전과제. **KORDI ISSUE PAPER**, 2024-07.
- 대한상공회의소. (2023). **청년 구직자 일자리 인식조사**. 대한상공회의소.
- 보건복지부. (2025a). **202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5b).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5c). **2025년 자활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 안준기. (2023). **정년제 등 계속고용제도 실태조사**. 한국고용정보원.
- 여성가족부. (2025). **2025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여성가족부.
-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n.d.). 분야별 지출.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sms/UOPKOSMA08>
- 이문수. (2022).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과 종사자 처우개선의 방향. **KDISSW 자활정책 Brief, Vol.6**.
- 이승호, 김근주, 이은주, 김기홍, 조영민, 고혜진. (2023). **고령 불안정 노동 실태와 정책 대응**. 한국노동연구원.
- 이승호, 이원진, 김수영. (2020). **고령 노동과 빈곤**. 한국노동연구원.
- 이승호, 진성진, 정영훈, 조영민, 손창현. (2022).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의 고용효과-주된 일자리 계속 고용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 조선일보. (2024). [사설] '역지로 짜내는' 노인 일자리 2조원, '퇴직자 재고용'에 쓰자.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0/26/LAF7KPG66FFXLB7AGKFN5KQHQ/>
- 최인혁, 고지현, 고혜진, 전승환. (2024).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 | 고용 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지원단.
- 통계청. (2024).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통계청.
- 한국고용정보원. (2024). **2022년~2032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추가 필요인력 전망**. 한국고용정보원.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6). **2016 노인일자리 통계 동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함선유, 고혜진, 하은솔, 임완섭, 이원진, 한창근. (2023). **제3차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기본계획(2024~2026) 수립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OECD. (n.d.). Poverty rate, https://www.oecd.org/en/data/indicators/poverty-rate.html?oecdcontrol=9f300511bc-var6=Y_GT6

Analysis of the 2025 Budget for the Employment of Vulnerable Groups

Ko, Hyejin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n this article, I examine the government's employment support initiative for 2025, one of the top 20 national agenda projects that aims to help socially disadvantaged groups improve their economic situation by providing job opportunities. The project seeks to increase work incentives for participants in self-reliance programs and relax support eligibility criteria for employers that extend employment for older workers or hire seniors. The 3-in-one fill-unfilled-jobs package, introduced this year, is designed to expand work experience opportunities for young Koreans so as to enable them to enter the job market smoothly. These policy efforts are positive, to some extent, in terms of their effectiveness, as the subsidy jobs created can help disadvantaged individuals, who might otherwise struggle to secure decent employment in the private sector, find and retain work. However, despite the impact this subsidy jobs project may have in raising employment rates among disadvantaged groups, the quality of such jobs, typically low-paid, is a concern that can no longer be ignored. For example, it is unlikely that the youth employment support project, implemented with a focus on involving small- and middle-sized firms, to succeed unless accompanied by improvements in these firms, in their working conditions and in public perceptions of them. In addition, ensuring that socially disadvantaged individuals enter the labor market and retain work would require greater government support for the organizations and workforce that administer these support programs.